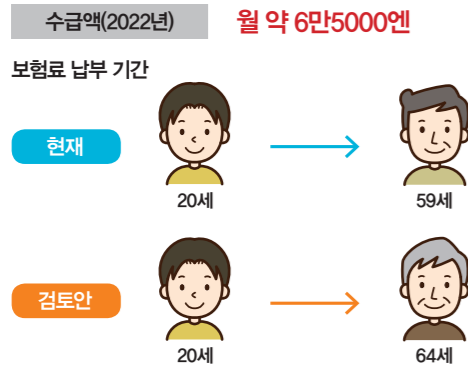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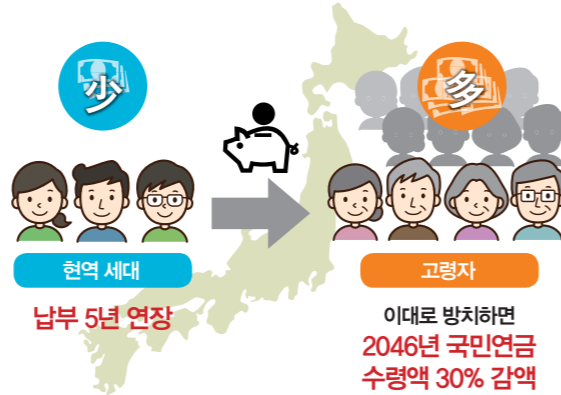


유한회사 등 법인 사업소와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시 5명 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가운데 숙박, 음식점, 미용원 등 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주 20시간 미만)의 경우는 그동안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만 후생연금 가입 대상이었지만, 2022년 10월부터는 101명 이상의 직장에서 일할 경우로 가입 문턱을 낮췄다. 100명 이하 법인의 단기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후생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후생연금 적용 대상이 이번 개혁회의에서 수습대에 오른다. 먼저 법인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2024년부터는 51명 이상 직장에서는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앞으로 아예 기업 규모 요건·제한을 철폐해 나간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또 현재 가입 면제 대상인 숙박업·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후생연금 가입 대상에 넣는 것도 연금 개혁회의는 검토 과제로 포함했다.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 나감으로써 공적연금 보호층을 두텁게 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서비스업 대상자들이 연금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감으로써 추후 연금 재정이 담당해야 할 부담을 사전에 피보험자와 사업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꼬집는다. 결국 연금 곳간을 최대한 채워 놓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납부 '5년 연장'의 배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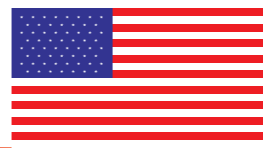


하지만 정부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허들은 만만치 않다. 후생연금은 보험료(급료의 18.3%)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여행업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 사업자에게 후생연금의 부담을 지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생연금 대상이 되는 단기근로자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들도 10%에 달하는 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물가의 지속적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언론이 이번 연금개혁 검토를 계기로 시산해 본 결과, '시급 1만원, 1일 5시간, 월 20일'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월 급료는 약 10만 엔. 이 직원이 후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본인 절반 부담분)는 8967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은 전 세계 고령화의 교과서라고 한다. 특히 공적연금이나 보험 등 사회 제도가 비슷한 한국에 일본은 훌륭한 참고서다. 연금 수술에 나선 일본의 배경,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이 한 수 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계출산율 0.8(일본 1.3)을 밀돌고, 고령화 속도도 일본을 앞선다. 2045년에는 고령화율도 일본을 추월해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또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M**

GLOBAL SENIOR STORY



미국편

건강 격차 줄이고, 영양원 품질 개선 나선다

2023년 예산에 나타난 미국 고령자 지원 정책 방향

Editor 이경원 텍사스주립대 교수

■ 2025년까지 7300만 명의 미국 베이비부머가 60세 대열에 들어선다. 의료 혁신 결과 베이비부머는 골다공증, 에이즈 등 각종 질병에도 길고 평안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들 은퇴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며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3년에 편성된 예산에서 노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충했다.

바이든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노인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은 모두 12가지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6가지만 꼽자면 아래와 같다. 예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해당 정부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1억760만 달러)
- 노인 지원 서비스 및 노인 센터(1억14만 달러)
- 노인 영양 프로그램(3억57만 달러)
- 전국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560만 달러)
- 노인 권리 및 정의 관련 프로그램(585만 달러)
- 아메리코프스(AmeriCorps) 노인 자원봉사단체(142만 달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권리 부여한다

바이든 정부의 고령자 지원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인들의 연령이나 장애, 인종이나 민족,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 소득 등의 요인에 관계없이 모두 공평한 기회를 갖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예산지원정책을 통해 노인들에게 의료, 교육, 교통,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시스템 등 자원의 공급과 이를 소비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담당 비서실장 대행이면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행정부(ACL) 행정관인 앨리슨 바크오프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모두가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을 때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노인 대상 의료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CL에 대한 예산지원은 노인 권리 보호와 서비스 혁신 같은 핵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뉴 노멀(New Normal)’ 문화에 맞춘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디케어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 것을 들 수 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이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색인종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과 사망률이 높았다는



고령화 담당 비서실장 대행이자 지역사회 행정부(ACL) 행정관인 엘리슨 바크오프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모두가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기여할 수 있을 때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엔필드의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의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해 의자를 활용한 운동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강화됐다. 인종과 계층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메디케어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인종의 노인이 낮은 가격으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약값을 낮추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의료 혁신과 질병 예방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값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료 지출이 많은 노년층에게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력 확충과 평가 강화로 요양원 품질 개선 나선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 요양원의 안전 및 치료 품질 개선을 통해 고령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미국 고령자 대다수가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낸다. 1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미국 내 1만5500개 이상의 정부 지원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요양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 및 시설 수준이 크게 지적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팬데믹

을 거치는 과정에서 요양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도 많다. 2020년부터 2021까지 2년 동안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 20만 명이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매년 수백억 달러의 세금이 요양원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준 이하의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요양원 수가 늘기 시작했고, 현재 전체 요양원의 약 5%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의 진입도 노인 돌봄의 질 저하라는 문제의 개선책이 되지는 못했다. 요양원의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부 노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요양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요양원이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직원 수를 늘리도록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 내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20분만 늘려도 코로나 확진 사례가 22%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봉사 프로그램 아메리코브 시니어 RSVP를 통해 노인 봉사단원이 지역 독거노인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데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요양원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삭감한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평가해 요양원 서비스 개선을 유도했지만, 제대로 된 품질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요양원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일회성으로 벌금만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준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해당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평가기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나아가 요양원 평가 항목도 보다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요양원 정보 공개해 대중의 선택권 높인다

또한 일반 대중이 요양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은 다양하다. 개인 사정 및 선호도에 따라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요양원에서 보낼 수도 있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에는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노인들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인센터, 가족 간병인 프로그램, 노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이번 노인 복지 관련 예산 증가는 시니어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됐지만, 기업이 운영하는 요양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요양원 직원 이직률,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 수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요양원들 사이의 비교도 가능하다.

사람들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은 다양하다. 개인 사정 및 선호도에 따라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고, 요양원에서 보낼 수도 있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에는 다양한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노인들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인센터, 가족 간병인 프로그램, 노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이번 노인복지 관련 예산 증가는 이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이기에 어떠한 모습의 노후든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노인들의 존엄성 향상 및 노후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M**